

'12·3 계엄사태'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참고했나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아닌 육참총장 국회 계엄해제 표결 저지 방안 고려 특수부대 외 경찰기동대 투입 '차이' 화상회의 의결 등 계엄법 보완 필요

12·3 계엄사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2018년 논란이 됐던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계엄사령관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는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관련 업무를 관

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담당 조직인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 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업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이순진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박 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을 두고도 비슷한 해석이 나온다. 김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박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같은 육사 출신이라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엄군 운용 방식도 기무사의 계엄문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문건에는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계엄해제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의결 시 계엄 해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리력으로 표결 자체를 막고 국회의원을 포고령에 반하는 현행법으로 체포·구속해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실제로 계엄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난 4일 오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소총을 든 계엄군 280여명은 국회 본관 정문 현관을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이 막아서자 창문을 깨고 본관 건물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체포대'를 꾸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계엄문건에는 국회에 20사단 1개 여단을 배치하고, 특전사 최정예인 707특수임무단이 중요시설 탈환 작전시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하도록 했으나 경찰 병력 투입 계획은 없었다.

이와는 달리 이번 계엄에는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등이 국회에 일선으로 배치되고 시민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되는 등 국회 진입 병력을 강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언론과 SNS 통제 방안도 기무사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께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3항을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앞서 기무사 계엄문건에도 '보도매체 보도내용 사전 검열, 불온 내용 차단'으로 '계엄사 보도검열단'과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이 꾸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엄군이 국회의장을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참석을 막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계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명식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 기능이 수행되는 곳이 꼭 본회의장만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장의 동의 하에 화상회의 의결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하게끔 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철도노조 파업' 광주·전남, 열차 51편 운행중단

코레일 비상수송체계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열차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비상수송체계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광주·전남·전북)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4일까지 한국철도공사와 교섭을 이어왔으나, 결국 최종 결렬되며 이날 파업에 나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 소속 노조원 2600여명 중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1000여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했고, 이날 광주·전남에서는 KTX 29편(호남선 18편·전라선 11편), 일반 열차 22편(호남선 13편·전라선 9편) 상·하행선이 모두 멈췄다.

오늘 수능 성적 통지... 광주·전남 만점자 0명

채점 결과 지난해 비해 평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6일 배부되는 가운데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명에 그쳤던 만점자는 올해 11명으로 늘어났지만 광주·전남 수험생 가운데 만점자는 한 명도 없었다.

5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수험생들에게 2025학년도 수능 성적 통지표를 재학 중인 고등학교 등 원서 접수 장소에서 배부한다.

수능 만점자는 11명(재학생 4명, 졸업생 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만점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 만점자는 6명, 1명, 3명, 1명으로 줄곧 한자릿수를 유지했다.

이에 이번 수능은 예년보다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 수학은 140점이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각각 11점, 8점 하락했다.

이에 코레일은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레일은 이용객 혼란 방지를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되며,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의 경우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쁜 고객의 경우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 전국철도노조 광주·전남·전북지역 조합원들이 5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5·18 이후 첫 계엄' 광주 최후 항쟁지서 '尹 퇴진 집회'

5·18민주광장 1500명 운집 내일까지 총궐기대회 진행

"광주시민 총궐기로 윤석열 정권 타도 하자!"

45년만의 비상계엄령이 국회의 저지로 6시간만에 해제된 지난 4일 5·18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광주지역 8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현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가 열린 5·18민주광장은 지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투쟁, 광주정신을 상징하는 장소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정유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광주시민 총궐기로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했다.

5월 단체는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들이 지난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려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첫 발언에 나선 윤남식 5·18민주화운동 공로회장은 "어제(3일)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명분없는 비상계엄 선언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1980년 군사독재정권의 폭거를 겪었던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역사의 퇴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5월 단체들은 오늘(4일)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단체도 발언에 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현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장은 "어젯밤 적과 교전이 있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계엄 발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 독재를 종식하자"고 덧붙였다.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는 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